

해양갈등의 점증적 제고와 우리나라 해양법집행세력 운용방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Hee-Cheol Y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핵심용어 : 해양분쟁, 해경, 해양법집행, 지역해패권

1. 연구목적

전세계 193개 국가 중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는 약 151개에 달하며, 이중 약 131개 국가는 해양법집행 세력으로 해양경찰조직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는 총 49개 국가 중 40개 국가가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데, 이중 25개 국가가 집중형의 해양법집행세력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청으로 운용되던 조직이 2014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되어 운영중에 있다. 다만,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지역 패권세력간 갈등구조의 제고와 해역별 분쟁 요소가 복잡화, 기능화 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기능 재정립과 위상제고는 다시 한번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전세계 해상법집행세력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법집행력 강화, 우리나라 해양의 갈등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변화되는 해양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양경비세력의 운용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변수역 해양갈등구조와 변화

주변수역에서 독도, 해양경계획정, 이어도문제, 해양활동, 자원개발, 해양(과학)조사, 불법어업, 해상교통로 등의 문제는 이미 상시적 이슈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동북아 지역해 패권경쟁과 연계되면서,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해양갈등이 '군사적' 경쟁구도와 비군사적 갈등의 혼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주변해역을 관통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동해, 황해 등은 동북아 지역동맹체를 연결하는 핵심 공간으로 그 역할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주변수역의 해양질서 역시 장기적으로 경성화 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해양법집행 세력의 기능 혹은 역량이 전통적 법집행에서 군과 경의 중첩기능, 국제범죄, 대양형(국제형)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세력을 운용하여야 하는 수요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해양법집행세력의 운용 현황과 시사점

국제적으로 해양법집행세력은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집중제는 약 63개 국가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약 75개 국가는 해군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 중 약 52개 국가는 한면만 바다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과 '경'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적다. 해안경비가 군사적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최근 해상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3년 분산되었던 해상법집행세력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의 조치는 특히 인력과 장비 인프라의 통합이면서, 무장경찰력을 갖춘 공안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법집행 질서에서 새로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해양경비세력의 효율화와 과학적이고 해역별 분쟁요소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세력운용 안정화가 필요하다.

4. 결론

변화된 해양질서에서 우리나라 해상법집행력은 분명 시대적 기능복합화에 따른 정보수요의 확대를 기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범죄)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법률정보, 지역해정보, 정치환경정보, 심리정보, 해양영토정보, 해양공간계획정보 등 '군'과 '정치적' 영역의 수요를 포괄한다. 과거의 해양경찰청의 온전한 재건으로도 여전히 한계를 느낄만한 변화다. 지역패권 세력 간의 완충적 지대로의 변화, 대양해 및 지역해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수사기획과 관련 정보의 포괄적 접근권, 남북관계 및 군경 복합영역에 대한 역할 등 다양한 세력 운용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변화된 질서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은 장기적 혼란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사 사

이 논문은 PE99536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easer@kiost.ac.kr, 031-400-6510